

지식을 통한 정치 혹은 정치를 위한 지식

언론학자의 정치 참여 현황과 특징 연구*

김성해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교수**

서보운 저널리즘학연구소 연구위원***

진민정 대구대학교 박사후과정****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언론학은 순수문학이나 자연과학과 달리 정치성이 짙다. 게다가 미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언론학자가 정책에 직접 개입할 기회는 확대되고 있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학자들도 많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작업은 없었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떤 근거에서, 어떤 자격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연구는 없다. 본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먼저 미디어 관련 법률과 이를 근거로 설치된 각종 이사회 및 위원회를 조사했다. 법에서 규정하는 참여 자격과 선정 방식을 다음 단계로 정리했으며 최종적으로 실제 참여한 언론학자 164명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폈다. 분석 결과, 언론 관련 이사회·위원회는 의결, 심의·자문, 중재·규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지역적으로는 서울 소재, 대학은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유학을 한 곳은 미국에 편중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다양성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해야 하는 미디어 정책에 있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2016년 현 시점에서 언론학자의 정치 참여는 피할 수 없는 책무에 속한다. 그러나 전문성이나 공익에 대한 소명의식이 아닌 정치권력에 대한 야망이 참여를 결정한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언론학자들의 더욱 바람직한 정치 참여 방향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KEYWORDS 언론학자, 정치 참여, 지식인, 지식권력, 전문성, 책무, 미디어정책

* 본 논문은 2015년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저널리즘분과'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 visionofsea@hotmail.com, 제1저자

*** sboyun21@gmail.com, 교신저자

**** minjjin@gmail.com, 공동연구

***** betulo@seoul.co.kr, 공동연구

1. 문제 제기

국내에서 언론학자가 권력 집단으로 등장한 시기는 비교적 최근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와 일본 등에서 유학한 제1세대 학자들은 언론학이 아니라 사회학이나 철학 등을 주로 전공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저널리즘, 방송, 광고와 홍보 및 문화연구 등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언론학 박사들은 제도권 내에서 정책결정과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권력 집단으로 성장했다. 문민정부로서 정체성을 강조한 김영삼 정부,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정치 변화 역시 언론학자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김성해·반현, 2011; 김영모, 2009; 최장집, 2009). 미디어 빅뱅(big bang) 혹은 미디어 융합(convergence), 일상의 미디어화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을 감안할 때 이들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도 예상할 수 있다.

언론학자가 행사하는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이들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관료 집단과 경제 엘리트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국민의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또한 각종 보고서, 저술 및 칼럼 등 언론학자들이 생산하고 유포하는 담론은 일종의 이론적 가이드가 되어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언론학자의 연구 영역은 저널리즘과 커뮤니케이션, 즉 신문·잡지·출판·방송·영화·통신·뉴미디어·광고·PR 등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현상 전반을 아우른다.

물론 경제학자나 정치학·법학 전공자들에 비해 권력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정치권력의 들러리를 서는 경우가 많고 실제 권력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 혁명의 가속화와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언론학자의 개입 기회와 영역이 넓어졌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200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제기된 「신문법」, 「방송법」, 「뉴스통신법」, 「언론중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등을 둘러싼 논란은 그 실체를 잘 보여준다(손석춘, 2014).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통신사업자 선정, 방송사나 PP, SO의 (재)허가 등에서 전문가인 언론학자의 의견은 핵심 담론이 되곤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제외하고도 장관급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막강한 권한과 명예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영방송의 이사과 같은 직위가 많아졌다. 대부분의 언론학자들이 무관심할지라도, 이와 같은 정치 참여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과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강명구, 2014).

권력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 정책결정 및 집행에 대한 참여와 자문 등은 일종의 권력 행사에 속한다. 책임과 의무에 대한 질문이 당연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언론학자의 정치 참여 기회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고자 했

다. 분석을 통해 향후 바람직한 정치 참여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이론적 논의

1) 지식과 권력 그리고 지식권력

권력은 지배, 통제, 정치, 권위 등과 뒤섞여 사용된다.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이 다수의 타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자기의 뜻대로 하게 만드는 ‘통제하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권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자원으로는 군사력, 자본과 명성, 권위와 지식 등이 있다. 지식권력은 그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자신의 뜻에 따르도록 설득하거나 권력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데에 있어 지식이 핵심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한구, 2004). 또한 지식 그 자체가 지배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하나의 중요한 기둥이 되고, 지식이 일종의 권력자가 된 경우를 뜻하기도 한다(김동춘, 2003).

지식과 권력이라는 두 단어의 결합은 사실 형용모순이다. 지식 그 자체는 자유로운 논쟁과 소통을 전제로 해서 존립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지향하지 않으며, 지식이 곧 권력을 창출하지는 않는다. 특히 근대적 지식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해방을 지향하고 비판 정신을 갖는다. 그리고 삶의 이론적 형상화 능력 및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에 대한 설명력과 설득력에서 영향력을 지닌다. 그렇기에 지식과 권력은 영향력 측면에서 다르다. 영향력은 사후에 획득된 것이며, 영향력에 의한 변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에게 가시적이고도 구체적인 이득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권력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상대방을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둬으로써 그의 행동이 자신의 이해 추구에 기여하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다(김만흠·손혁재·김동춘·홍일표·김갑식, 2003).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대해서 푸코(Foucault, 1969)는 〈지식의 고고학〉에서 진리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에 의해 규정되는 하나의 지식이라고 보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했다. 푸코는 지식의 내용보다는 지식을 둘러싼 관계들, 즉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관심을 두었다. 지식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혹은 누가 이러저러한 지식을 규정하는가가 문제라는 인식이었다. 그에 따르면 지식은 그 역사적 시대에 맞게 구성되며, 이러한 ‘담론의 질서’에는 권력이 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담론 자체가 권력에 의해 작동하며 정당화된다고 주장했다.

아롱(R. Aron)은 지식인을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대학이나 기술전문학교에

서 직종의 행사에 필요한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 즉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두 번째는 지식과 문화를 담당하는 공동체의 일원을 지칭하는데, 이 안에는 특히 작가, 학자, 예술가, 교수, 비평가 등이 주종을 이룬다(정명환, 2003).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전문가로서의 교수 집단은 특히 지식인을 대표하며, 적지 않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권력구조를 파헤치는 데에 천착한 밀즈(Mills, 1956)는 파워 엘리트(Power Elite)를 경제·군부·관료·상징 엘리트 등 네 가지로 구분한다. 경제 엘리트는 대기업을 소유하거나 대주주로 참여하거나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 군부엘리트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으며, 관료 엘리트는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학자 집단은 언론인, 종교인 등과 함께 상징 엘리트에 포함된다. 밀즈의 구분을 토대로 1990년대 미국을 분석한 윌리엄 돔호프(William Domhoff) 또한 상징 엘리트에 속하는 지식인이 권력의 핵심 부서를 장악하고 있고, 다른 엘리트와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었다(Domhoff, 2009).

한국사회에서 지식인 집단이 본격적으로 정치 참여를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으로 알려진다. 당시 경제발전과 자주국방 등을 내세웠던 박정희 정부는 미국과 독일 출신의 박사를 초빙해 이들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에서 창출한 이런 ‘전통’은 2000년대 들어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김건우, 2015; 김영모, 2009). 대표적으로 2006년 중앙일보가 펴낸 <대한민국 파워엘리트>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파워엘리트 중 대학 교수는 5388명(17%)에 이른다. 적지 않은 정부 고위 관료나 기업체 임원 및 군대 장교가 해외나 국내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마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넓은 의미의 지식인이 파워엘리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높다.

특히 대학교수들은 그들만의 주류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 ‘주류’는 한 사회의 여론을 만들어내고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을 지닌 계층으로 소수의 권력층과 거대언론의 논객들, 보수언론을 통해 사회적 명망을 쌓아가는 국외유학과 학자 등이 중심을 이룬다(이태희·신윤동욱, 2002, 12, 23). 김만홍 등(2003)은 2001년 7대 주요 일간지에 실린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쟁점에 대한 외부기고자의 칼럼 내용과 필진을 추출해 분석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언론을 통해 활동하는 이른바 지식인은 사실상 교수 집단이었다. 출신대학별로는 전체 필진의 53.8%가 서울대 출신이고, 미국 유학자 비중이 60%로 학력배경에서 미국 유학 여부가 가장 지배적인 특징적 변수였다. 언론과 대학교수의 권력관계에 대해서 박노자(2001)는 교수 집단을 한국의 대표적인 특권 집단으로 보고, 지식사회가 언론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과 교수 집단이 카르텔을 이뤄 공존하면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학벌사회>라는 책을 쓴 김상봉(2004) 역시 권력을 단순히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단위 사회 속에서 공공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하며, 한국의 권력이 서울대 출신에 의해 독점되어 있음을 비판했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등 핵심 권력에 서울대 출신이 독점하고, 다른 대학 출신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이처럼 지식을 권력으로 사용하는 지식인과 지식권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실천적 탐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식인은 권력에 비판적이기보다는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면서 지식인으로서의 정치 참여와 책무에 대한 논의는 더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2) 지식인의 정치 참여와 책무

지식인의 현실 참여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대학(大學)>에 등장하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를 되뇌면서 학문을 배워 현실정치에 나서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였다. 조선 후기 당쟁이 격화된 이후로 일부 지식인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관료적 지식인’과 거리를 두고 학문에만 정진한다는 ‘산림(山林)’이 되어 ‘재야적 지식인’의 한국적 전형을 이루었다. 이러한 관료적 지식인과 재야적 지식인의 양립은 상당한 입장 차이를 두고 계속되었다. 대체로 ‘산림’을 높이 평가하는 지적 전통이 이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산림’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정치 참여 집단이었으며 오히려 이들이 제시한 정치 의제가 미래지향적이지 못했다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다(이정철, 2010). 지식인이 행정부와 입법부에 들어가 정치에 참여하는 전통이 시작된 박정희 정권 당시에도 근대화를 맞아 지식인의 임무와 관련해 정권의 근대화 정책 방향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대항 지점을 형성하고자 했던 비판적 지식인론과 반대로 정권에 참여해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운영하는 것이 지식인의 임무라고 생각했던 ‘근대화 인텔리겐치아론’의 입장이 대립했다(김건우, 2015). 그러나 권력에 직접 저항하지 않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것은 지식인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조건으로 암암리에 강조되었고, 당시에도 관료의 길을 선택한 지식인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다.

푸코는 이러한 지식인의 양립을 ‘보편적 지식인’과 ‘전문적 지식인’으로 구분하고 후자에 의한 정치 참여의 적절성을 주장했다. 진리 탐구와 권력 비판에 주력하는 보편적 지식인에게서는 정치 참여가 자신의 학문적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권력 비판은 무엇보다 권력의 외부에서 그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때에만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과거 일부 지식인이 정권의 합리화를 위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것에 대한 비판도 여기에서 근거한다. 그러나 푸코는 특정한 지식을 통해 정치적 투쟁에 가담하고, 시민사회의 깊은 곳으로부터 개혁적인 힘을 끌어올리는 ‘전문적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했다(Foucault,

1972).

이처럼 정치 참여는 전문적 지식인의 책임이자 의무다. 문제는 지식인의 정치 참여 여부가 아니라, 그 참여의 내용과 방식이다. 오늘날 지식인은 특정한 지식 및 지식체계를 갖추고 권력화를 시도하거나 권력의 그물망에 포획돼 스스로 위기를 자처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미 오래전에 리오타르(Lyotard, 1984/1993)는 거대담론의 유효성 상실과 함께 근대적 지식인의 죽음을 선언했고, 드브레(Devray, 2000/2001) 역시 “과거의 지식인은 시대를 명료하게 해석해 주었지만, 지금의 지식인은 시대의 어둠에 어둠을 더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하층민과 단절하고 폐쇄적인 특권 계급으로 변질한 20세기 말의 지식인을 향해 가혹한 비판을 가했다. 또한 사이드(Said, 2012), 자코비(Jacoby, 1987) 같은 학자들은 지식인에 관한 비판적 저서를 통해 독립적인 지식인과 권력과 관계 맺는 지식인을 철저히 구분한다. 사이드는 지식인이 영원히 불안정한 상태의 타자가 되는 망명자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이윤과 보상에 휘둘러 자기 영역 바깥 문제에 눈감는 전문가주의를 거부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였다. 자코비는 권력과 관계를 맺는 지식인을 ‘교육전문가’라고 부르고, 이들을 토론은 하지 않으면서 명성이나 쌓고 비전문가들을 겁주거나 하거나, 학문적 자격증과 사회적 권위로 무장한 채 위원회에 고용되어 다양한 기관들에 아부하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했다.

그렇기에 지식인의 권력 진출은 지식인의 자기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진덕규(2011)는 지식인의 정치 참여를 위한 자기성찰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지식인의 정치 참여는 첫째, 현실문제를 해결할 자기 논리의 설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둘째, 자기 논리를 통한 현실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셋째, 권력의 장악보다는 시민을 위한 권력의 길들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언론학은 정보기술 발달과 미디어 융합 등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최고의 전성기’(임영호, 2013) 혹은 ‘풍요의 언론학 시대’(김경자, 2015)를 맞이하고 있다. 지식인으로서 언론학자는 한국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지도층의 잘못된 언론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시켜 주는 규범적 역할(또는 책임과 의무)을 다해야 한다(김학수, 1999). 현재의 언론 현실은 이러한 고민을 더 필요케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공영방송조차 정권의 홍보도구로 전락하고, ‘저널리즘의 상업주의’라는 멍에 걸린 저널리스트는 사실과 관련 없는 홍보성 기사나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한 어부지리 기사 작성에 급급해 더는 저널리스트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의 자유 역시 더욱 위축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보고서’나 국정없는 기자회견의 ‘세계언론지수’에 의하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2011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자유국으로 변경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

다. 독일의 언론 타츠(Taz)는 2014년 2월 21일 ‘대한민국에서의 언론의 자유, 대통령의 무릎에서 노는 애완견(Pressefreiheit in Südkorea Die Schoßhündchen der Präsidentin)’이라는 제목을 단 기사를 내보냈다. 한국의 언론 현실은 외국 언론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의 훼손으로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황의 책임은 언론에게만 있지 않다. 언론의 감시역할과 바른 방향을 안내할 언론학자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김승수(2014)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수호할 책임이 우선적으로 미디어 종사자와 언론학자에게 있는데도 이들 대부분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파괴되는 상황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고 개탄한다. 더군다나 언론학과 언론학자들이 점점 더 자본 및 권력에 포섭되어 공공지식인의 대오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식인 학연공동체’로 인해 지식인들 사이에서 상호비판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이 한국적 풍토이기는 하지만, 언론학 내부에서도 한국의 언론 상황에 대한 언론학자의 도의적인 책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예컨대, 어떤 이는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와 기사들을 비판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언론학자의 반성을 촉구한 바 있다.

언론학자들이 방송법을 만드는 데 기여했고,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문 역할이나 온갖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방송사의 사외이사로서, 또 시청자위원으로서, 평가위원으로서, 자문위원으로서 과연 언론 현실을 직시하고 재해·재난보도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는 데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돌아볼 이유가 충분히 있다. (설진아, 2014, 14쪽)

더 나아가 한 언론사 칼럼을 통해 무책임한 결정으로 언론의 공공성을 파괴하게 만든 언론학자들을 질타한 이도 있다.

방송을 망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도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는 집단이 있다. 바로 언론학자들이다. 미국에서 공부한 언론학자들 중에는 유럽에 견주어 언론의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미국을 표준으로 삼는 이들이 많다. 꽤 많은 연구비를 지원받기도 한국 언론의 현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언론정책을 농단한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도 한국언론학회 등을 중심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 과오를 비판하지 않는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한다. 이제 한국 언론 수난사에 그들 이름을 등재할 때가 됐다. (이봉수, 2012, 6, 26).

김동민(1999) 역시 많은 언론학자들이 언론개혁의 의지를 표명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잣밥에 더 관심이 많다고 비판한다. “재력 있는 언론 단체와 방송사 등을 기웃거리며 연구비를 챙기는 사람들, 방송위원이나 방송사 이사를 꿈꾸며 백방으로 줄을 찾는 사람들, 언론재벌이 운영하는 재단의 지원으로 해외연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언론학자의 정치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언론과 관련된 주요 법안과 정책 결정에 전문가인 언론학자가 참여하는 것은 위기에 빠진 한국 언론의 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주요 정책 결정에 언론학자가 지나치게 배제되고 있고, 혹은 참여한다 해도 그 존재 자체가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예컨대, 강준만(1994)은 방송정책과 관련한 여러 위원회가 존재하고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 안에서는 교수가 갖는 신뢰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른바 ‘교수의 상징적 이용’ 전술이 구태의연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과 관련한 지식을 통해 돈, 명예, 권력 등의 희소자원이 생산되고 분배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또한 지식권력이 창결하는 이 시대에 어찌면 완전히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지식인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언론학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정치 참여는 무엇이며, 규범적이고 바람직한 참여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3.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1) 연구문제

언론학자의 정치 참여 현황과 정치 참여 언론학자의 특성분석을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언론학자에게 열려 있는 정치 참여 기회는 어떠한가,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가?

- 연구문제 1-1: 언론학자에게 열려 있는 정치 참여 기회는 무엇이 있는가? 언론 관련 법률에서 규정된 이사회와 위원회는 어떤 곳이 있으며, 참여 자격과 역할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1-2: 언론 관련 법률에서 규정된 이사회와 위원회의 구성·운영 현황분석을 통해 본 참여 유형과 참여 가능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정치 참여 언론학자의 특성은 어떻다고 할 수 있으며, 정치 참여를 결정하는 언론학자의 배경 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1: 정치 참여 유형별로 참여한 언론학자의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2: 정치 참여 유형별로 언론학자의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분석대상 선정 및 분석방법

(1) 분석대상 선정

언론학자의 정치 참여 현황과 정치 참여 언론학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에 따라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먼저 본 논문에서 중요한 분석대상인 ‘언론학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대학에서 언론 관련 학과 혹은 유사 전공 학과에 재직하면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대학교수이자 학자를 말한다. 현재 대학에 재직하고 있더라도 전직 언론인 출신의 교수, 산학교수, 겸임교수, 교육전담교수는 제외했다. 반면 대학이 아니라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이나 미디어연구소 등에 재직하면서 언론 관련 연구를 수행해온 사람은 분석대상으로 포함하고 소속 대학명을 ‘기타’로 구분하였다. 또한 언론유관기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학이나 정치학 등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는 언론학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정치 참여’는 언론학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관장 법률에서 규정되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이사회’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정부 행정기관은 17부 5처(국무총리 직속 산하기관) 16청(17부의 하부기관)인데, 이중 언론학 관련 부처로는 대통령 직속 산하기관인 방통위, 그리고 행정부로 미래부와 문체부가 있다. 먼저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및 중편·보도PP, 방송통신사업 등을 관할하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산하기관으로 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행정부인 미래부는 통신, 인터넷(정보화), 전파 방송 등을 관할하며 우정사업본부(POST), 국립전파연구원(RRA) 등의 5개 소속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한국과학기술연구회(KIST) 등의 5개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또 다른 행정부인 문체부는 문화예술 진흥과 국민의 문화복지 구현,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육성, 국민체육 진흥 등의 정책을 담당하며, 한국문화원, 국립문화원 등 17개 소속기관과 33개 소관기관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언론학 관련 행정기관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 한정한다. 미래부를 제외한 이유는 언론학 관련 법률을 상당 부분 방통위와 공동으로 소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참여의 특성은 ‘참여 유형’과 ‘참여 가능성’으로 말한다. 먼저 ‘참여 유형’은 운영 목적, 이사회·위원회의 임무, 기능 등에 대한 법률적 규정을 근간으로 언론학자가 수행하

게 되는 역할이다. 참여 시의 권한 정도와 기관의 운영 목적에 따라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 인지를 구분하였다. ‘참여 가능성’은 전공분야와 자격기준의 구체적 명시여부를 말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혹은 시행령)에서 이사회·위원회의 자격기준으로 언론학 관련 전공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직업으로서의 교수(연구원)가 명시되었는지, 그리고 언론 관련 학회 추천인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지 등을 통해 가능성 정도를 구분하였다.

끝으로, 배경요인은 ‘인구학적 배경’과 ‘학력 배경’으로 구분했다. ‘인구학적 배경’은 성별, 출생년도, 정치 참여 당시의 연령,¹⁾ 그리고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소재지를 지역을 말한다. ‘학력 배경’은 출신대학과 최종학위 취득국가(유학배경)로 한정한다. 학력 배경으로 학자로서의 전공분야와 과년한 전문성 역량은 별도의 논문으로 분석하였기에 본 논문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²⁾ 학력 배경은 지식인으로서 언론학자의 정치 참여가 ‘학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소위 ‘유학파’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의 활발한 정치 참여가 이루어져왔는데 언론학자의 정치 참여에서도 ‘미국유학’이란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연구문제 및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과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언론학자의 정치 참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관련 정부부처의 관장 법률, 방통위와 문체부 홈페이지, 이사회 운영결과보고서 등을 수집한 후, 조작적 정의에 따라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방통위와 문체부의 관장 법률의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대상인 이사회와 위원회를 선정하고,³⁾ 세부 조항분석을 통해 위원회와 이사회 성격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언론학자의 정치 참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대상인 이사회와 위원회의 전, 현직 명단을 위원회 사이트, 백서, 언론사 보도자료, 언론보도물 등을 통해 임명연도와 기수별로 취합하였다. 기간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노무현 정부 이후에 본격화되었음을 고려해 2003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로 제한했다. 그리고 이사회와 위원회 전체명단 중에서 언론학자를 선정하고, 인구학적 배경인 성별, 출생년도, 정치 참

1) 정치 참여 당시의 연령은 임명이나 위촉 첫해의 언론학자의 만 나이이다.

2) 언론학자의 학문적 배경, 즉 학자로서의 전문성과 대표성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논문 최낙진·김성혜(2016). 언론학과 권력: 정치화된 지식의 위험한 줄다리기. <의정연구>, 48회에 게재하였다.

3) 방송법에서 각 방송사업자에 설치·규정하고 있는 시청자위원회는 정부 행정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 방송사업자 단위로 운영되는 것이기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여 당시의 연령, 그리고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소재지를, 그리고 학력 배경으로 출신 대학과 최종학위 취득국가(유학 배경)로 조사했다. 해당 데이터는 연구자 3인이 포털 사이트의 인물검색, 각 대학 홈페이지, 한국언론진흥재단 인명부 등을 통해 수집했다.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자간의 교차확인을 거치고, SNS 관계망을 통해서 재확인 과정을 반복해 오류를 최소화했으며, 최종 완성된 데이터 분석은 PASW를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4. 분석결과

1) 언론학자의 정치 참여

먼저 방통위와 문체부 관장 법률 중 언론학과 관련된 법률에 근거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이사회와 위원회는 <표 1>과 같다.

방통위의 경우는 12개의 법률과 10개의 시행령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이사회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5개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존립하게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

표 1. 방통위· 문체부 관장 법률에 근거한 이사회· 위원회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법률명	이사회· 위원회	법률명	이사회· 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방송법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방송평가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기금관리 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위원회
방송법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사회 방송광고규형발전위원회		

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법」에 근거해서는 ‘한국방송공사’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가, 그리고 ‘방송평가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방송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서 규정된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의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방문문화진흥회 이사회’, 그리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 임원(이사회)」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있다.

다음으로 문체부는 2015년 현재 182개의 법령을 관장하고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외한 법률은 문화예술부문(19개), 문화콘텐츠산업부문(18개), 관광부문(6개), 체육부문(13개), 사행산업부문(1개), 문화재청 부문(7개)의 62개다. 이 중 언론학과 관련된 법률로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뉴스통신진흥 이사회」의 구성·운영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와 ‘한국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이 규정되어 있으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방통위와 문체부의 소관 이사회·위원회의 구성·운영 현황분석을 통해 참여 유형과 참여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이사회 및 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방통위는 2008년 기존의 방송위원회를 개편해 발족된 기구로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방통위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나머지 위원 4인으로 이루어지며, 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2인,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3인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방통위는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리고 정치활동에 대한 관여도 금지되는 정무직 공무원이 된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며, 상임위원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게다가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와 감사,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이사와 감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임명자격은 법률(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

여 ①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②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③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⑤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⑥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공무원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전공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공분야가 방송, 언론, 통신뿐만 아니라 법조계나 고위공직자들이 해당되는 법학, 행정학 등 상당히 다양하게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대통령이 원하는 측근이면 누구라도 임명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동법에 따라 (구)방송위원회와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합해 2008년 설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위원회다. 대통령이 위촉한 심의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 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대한민국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을 상임으로 하고, 상임위원 3명은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되는 데에 필요한 별도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은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분야별로 15명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는데,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만 되어 있어 있을 뿐이고 구체적이지 않다.

둘째, ‘방송법’에 근거해서는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와 다양한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먼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제46조에 있다. 이사회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모두 11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방통위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모두 비상임이며 이사장은 이사 중 한명을 선출한다. 이사회는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권한 등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모호한 조항(방송법 46조 ③)만 있다. 김정환(2012)은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SBS사장이 KBS 이사장이 되어도 문제가 없고 조선일보 사장이 공영방송 이

사가 되는 데 견제할 법적 조항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하고 정당인이 아니면 된다는 것인데, 또 정당인이어도 당적을 포기하면 되도록 돼 있다”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뿐만 아니라 「방송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다양하다. 먼저 방송평가위원회(제31조)는 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편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방통위 위원장이 방통위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다. 동법 제35조에 따른 시청자권력보호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 수렴 및 시청자불만처리, 청원사항에 관한 효율적 심의 수행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방통위 위원장이 방통위의 동의를 얻어 9인의 위원을 위촉하는데, 마찬가지로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다. 마찬가지로 동법 제35조3에 의거한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 등 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분쟁 조정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조정(안)을 방통위에 건의하는 기능을 한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통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방통위 위원장이 방통위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데,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격요건으로는 ①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법률·행정·경영·회계·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④ 이밖에 방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를 보면 신문방송 관련 학과 교수로 언론학자가 해당될 수 있으나, 자격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다음으로 제35조의4에 근거해 2010년 구성된 자문 위원회인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방송의 여론다양성 보장을 설치 목적으로 하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와 산정,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방통위의 의결을 거쳐 방통위 위원장이 위촉한다. 자격요건은 “신문방송, 통계, 법률, 행정, 경제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방송, 신문, 인터넷 및 광고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시청률·구독률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미디어 다양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35조5에 근거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설치 목적으로 한다. 위원은 9명으로 하며, 방통위 위원장이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 위

촉한다. 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매년 평가한 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의 자격요건으로는 방송, 통신, 또는 공정경쟁 관련 학과에서 재직 중인 교수,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판사, 검사, 변호사, 미디어 관련 단체에서 임원 재직자(경력 5년 이상으로 한정), 그 밖에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방송법」 제42조의3 내지 4와 함께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근거,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다.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2008년 구성된 자문위원회로, 지역방송 발전 관련 지원계획 및 지역방송에 관한 지원정책의 심의, 지역방송의 전국적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의 평가, 지역방송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등 기능을 갖는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방송법에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위원수가 전체 5인에서 9인으로 확대되었다. 방통위 위원장이 방통위 상임위원 중 1인을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추천 인사 2명, 방통위 상임위원 1명,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 추천 각 1명씩, 그리고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인사 2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만, 전반적인 자격요건은 지역방송에 관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만 규정되어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그러나 학회 추천 인원이 명확히 고시되어 있어 언론학자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위원회다.

넷째,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근거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여, 진흥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이사장 1인과 이사 9인, 그리고 감사 1인을 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 9인에 대해서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임명한다는 규정밖에 없어 다소 모호하다.

다섯째,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에 의거해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심의·의결 기구다. 방통위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교육방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교육방송이 행하는 방송의 종합적인 기본계획, 예산/자금계획 및 운용계획, 정관 변경 등을 다루며 의결하는 중요

표 2.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사회·위원회의 참여 유형과 참여 가능성

이사회·위원회 현황				참여 유형	참여 가능성
명 칭	인원(명) (상임:비상임)	임명/추천	자격규정		
방송통신위원회	5 (5:0)	대통령 임명 • 대통령 추천 2인 • 국회교섭단체 추천 3인	전공 분야 명시	의결	높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9 (3:6)	대통령 임명 상임 3 국회교섭단체 추천 3인 국회소관상임위 추천 3인	별도 자격 요건 규정 없음	심의/규제	낮음
방송평가위원회	7 (0:7)	방통위 위원장 임명	별도 자격 요건 규정 없음	심의/자문	낮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9 (0:9)	방통위 위원장 임명	별도 자격 요건 규정 없음	심의/자문	낮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7 (0:7)	방통위 위원장 임명 • 문체부장관 추천 1인 포함	교수, 관련 전공 명시	심의/자문	높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8 (0:8)	방통위 위원장 위촉	교수, 관련 전공 명시	심의/자문	높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9 (0:9)	방통위 위원장 위촉	교수 명시, 그러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심의/자문	낮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9 (0:9)	방통위 위원장 위촉 상임 2인 국회 추천 2인 위원추천단체 5인	교수, 관련 전공 명시, 학회 추천	심의/자문	매우 높음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11 (0:11)	대통령 임명 방통위 위원장 추천	대표성을 고려한다는 규정만으로 모호	의결	낮음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	9 (0:9)	방통위 위원장 임명 교육부장관 추천 1인 교육관련단체 추천 1인	별도 자격 요건 규정 없음	의결	낮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9 (0:9)	방통위 위원장 임명	전문성과 대표성 고려한다는 규정만으로 모호	의결	낮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사회	10 (4:6)	상임: 공사 사장 임명 비상임: 기획재정부장관임명	별도 자격 요건 규정 없음	의결	낮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11 (0:11)	방통위 위원장 임명 • 방송사업자 추천 6인 • 공인회계사, 법조인 각 1인 • 관련학과 교수 1인	교수, 관련 전공 명시	심의/자문	높은 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대한 자격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이사회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규정되어 있다.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임원은 사장 1명, 이사 10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이사는 상임이사 4명과 비상임이사 6명으로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상임이사는 사장이, 그리고 감사와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사 등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와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구로 위원장 1인을 포함, 11명의 위원으로 방통위 위원장이 위촉한다. 방통위의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미디어랩의 중소방송 결합판매 지원 이행실적 평가,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 조정 등의 심의기능을 한다. 위원 구성에 대한 요건이 2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방송사업자 추천하는 사람 6명,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재직자 1명, 공인회계사 1명, 방송, 광고, 행정, 경제, 경영, 법학 관련 학과의 교수 1명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인은 방송, 광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모호하게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관할 법률 기반 이사회 및 위원회의 현황분석을 통한 언론학자의 참여 유형과 참여 가능성은 <표 2>와 같다. 먼저 참여 유형은 참여시의 권한 정도와 기관의 운영 목적에 따라 의결, 심의·자문, 규제, 중재로 구분된다. 대체로 이사회는 ‘의결’, 위원회는 주로 심의·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참여 가능성은 법률(혹은 시행령)에 명시되어진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언론학 관련 전공에 대한 명시 여부, 직업으로서의 교수(연구원)의 명시 여부, 그리고 언론 관련 학회 추천인 포함 여부의 3가지가 다 명시되어 있으면 언론학자의 참여 가능성을 ‘매우 높음’으로, 이 3가지의 기준 중 일부만이 명시되어 있으면 ‘높음’, 자격 규정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낮음’으로 구분했다. 구분 결과, ‘매우 높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높음’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해당되었으며, 그 외는 ‘낮음’에 해당되었다.

(2)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이사회 및 위원회

문체부 관장 법률에 규정된 이사회로 대표적으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가 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2005년 문체부 소속 비영리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연합뉴스의 대주주로, 연합뉴스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뉴스통신진흥과 공적책임 실현, 연합뉴스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뉴스통신 발전 위한

연구와 학술사업, 연합뉴스 이사진 추천과 예산결산 승인, 경영감독 등을 책임지고 있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자격에 관한 조항으로는 제26조 4항의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고 모호하게 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임명하되, 일간신문 대표조직과 방송사업자 대표조직에서 추천인 각 1인과 국회의장 추천 3인을 포함한다.

둘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와 한국언론진흥기금관리 위원회가 있다.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및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3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비상임 감사 1인으로 구성된다. 이사장은 문체부장관이,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임은 재단 이사장이 한다. 이사장과 이사, 감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다음으로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진흥기금을 관리·운영하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설치됐다.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위원장을 맡고,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동법 시행령 30조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금 담당 상임이사를 포함해,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며,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영,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지원기준 등을 심의한다. 마찬가지로 동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 구성되는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매체나 사업자의 영향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심의기구다. 여론집중도조사의 범위 및 대상, 여론집중도를 산정하기 위한 조사내용·조사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등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및 여론집중도의 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하여 요청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위원 자격에 대해서는 신문, 방송 등 미디어 관련 분야, 시장경쟁정책 또는 산업조직 관련 분야, 사회조사분석 또는 통계 분야 관련 교수나 연구원, 그리고 미디어산업 또는 시장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타 위원회에 비해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셋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981년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가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언론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시정권고, 불공정 선거기사 심의 등을 담당한다. 이 위원회에서 다루는 언론에는 ‘방송, 신문,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은 물론 뉴스통신과 인터넷 신문 등’이 모두 포함되어, 위원회

표 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이사회·위원회의 참여 유형 및 참여 가능성

이사회·위원회				참여 유형	참여 가능성
명 칭	인원(명) (상임:비상임)	임명/추천	자격규정		
한국언론진흥재단	9 (3 : 6)	재단 이사장 임명	법률상 명시된 것은 없음	의결	낮음
한국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10 (2 : 8)	재단 이사장 임명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포괄적 명시	심의/자문	낮음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9 (0 : 0)	문체부 장관 임명	전공 분야 명시, 교수 명시	심의/자문	높음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7 (1 : 6)	대통령 임명 국회의장 추천 3인 일간신문사업자, 방송사업자 대표조직 추천 각 1인 포함	전문성과 대표성 고려 규정으로 모호	의결	낮음
언론중재위원회	90 (0 : 90)	문체부 장관 임명 법원행정처 추천 법관, 대한변호사협회장추천 변호사 등을 포함	관련 전공 규정, 교수 규정	중재	매우 높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9 (0 : 0)	문체부 장관 임명 •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학회 추천인사 각 1인 포함	관련 학과 명시, 학회 추천 포함	심의/자문	매우 높음

는 40명에서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고 문체부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중재부는 서울과 지역으로 구분되어 선임되는데, 서울의 경우 인구수와 중재 비중 등을 감안해 모두 8개의 중재부가 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및 제주 중재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자격요건으로는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법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전직 언론인, 그리고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중재위는 중재부장(부장판사)과 변호사 1명, 전직 언론인 1명, 그리고 언론학이나 타 학과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18개 중재위의 90명의 중재위원 중 언론학자나 타 전공 교수들이 참여할 비중은 40%에 이르러 단일 위원회로는 가장 많은 언론학자들이 참여하지만 실제 권한은 그리 크지 않다.

넷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근거로 2004년 발족, 2016년 12월31일까지 존속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문체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의 자격 조건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포괄적이지만,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명을 포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명확히 언론학자의 참여가 열려 있는 위원회로 지금까지 비교적 많은 언론학자가 참여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적 규정 분석을 통한 언론학자의 참여 유형과 참여 가능성은 <표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는 ‘의결’ 유형에 속하며, 한국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심의/자문’ 유형에,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 유형에 속한다.

언론학자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법률(혹은 시행령)에 자격요건 명시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매우 높음’,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높음’,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와 같은 ‘의결’의 참여 유형에는 참여 가능성이 낮고, 언론학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자문, 심의, 평가의 참여 유형에 참여 가능성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방통위와 문체부 소관 법률에서 규정된 이사회·위원회는 19개로, 참여 유형별로 ‘의결’ 7개, ‘자문·심의’ 10개, ‘중재’ 1개, ‘규제’ 1개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의결’ 참여는 방통위 관할 법률에서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어 방통위가 언론 관련 최고 기구임을 보여준다. 참여 가능성은 ‘매우 높음’이 3개 위원회, ‘높음’ 5개, ‘낮음’ 11개로 참여 가능성이 낮은 곳이 많았다. 이러한 것은 ‘전공에 대한 전문지식’을 통해 정치 참여의 기회가 열려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전공자들과 그 기회를 나누어 그 참여 기회의 폭을 줄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치 참여 언론학자의 특성 분석

(1) 정치 참여 언론학자 현황

방통위와 문체부 소관 이사회·위원회는 참여 유형별로 ‘의결’ 7개, ‘심의·자문’ 10개, ‘중재’ 1개, ‘규제’ 1개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참여 가능성은 ‘매우 높음’ 3개, ‘높음’ 5개, ‘낮음’ 11개로 구분된다. 정치 참여를 결정하는 언론학자의 배경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법률적 규정된 19개의 이사회와 위원회 중에서 참여 유형별로 참여 가능성 정도와 소관 행정부서를 고려해 ‘의결’ 5개, ‘심의·자문’ 5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중재, 규제는 각각 1개에 불과하였기에 이 둘을 ‘중재·규제’로 묶어 2개를 선정했다. 그 결과 3개 참여 유형의 12개의

표 4. 언론학자의 정치 참여

구분	위원회명	참여 유형	참여 가능성	참여 언론학자(명) [2003.4~2015.10]
방통위 소관 (7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높은 편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	낮음	8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심의·자문	높은 편	11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심의·자문	매우 높음	8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의결	낮음	13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	의결	낮음	4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의결	낮음	8
소 계				59 (36.0%)
문체부 소관 (5개)	한국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심의·자문	낮음	7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심의·자문	높은 편	9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의결	낮음	4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매우 높음	64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심의·자문	매우 높음	21
소 계				105 (64.0%)
계	이사회 4개, 위원회 8개			164 (100.0%)

표 5. 참여 유형과 참여 가능성에 따른 언론학자 참여현황

구분		이사회·위원회 수(A)	참여 언론학자수(B)	B/A
참여 유형	의결	5	36명 (22.0%)	7.2
	심의·자문	5	56명 (34.1%)	11.2
	중재·규제	2	72명 (43.9%)	36.0
참여 가능성	매우 높음	3	93명 (56.7%)	31.0
	높음	3	27명 (16.5%)	9.0
	낮음	6	44명 (26.8%)	7.3

이사회 및 위원회를 최종 선정했으며, 2003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이 이사회·위원회에 참여했거나 현직에 있는 언론학자는 164명이었다.

방통위 소관 이사회·위원회와 문체부 소관 이사회·위원회별로 볼 때 방통위 소관 이사회·위원회의 수(7개)가 문체부 소관 이사회·위원회 수(5개)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언론학자들이 참여가 두드러진 것은 문체부 소관이었다. 즉 방통위 소관 7개의

이사회·위원회에 59명의 언론학자(기관별 평균 8.43명)가, 문체부 소관 이사회·위원회에 105명(기관별 평균 21명)의 언론학자가 참여해 기간별 참여자 수가 문체부 소관 이사회·위원회가 더 많은 특징을 보였다.

이를 각 이사회·위원회를 참여 유형과 참여 가능성에 따라 구분해 보면 <표 5>와 같다. 참여 유형에 따라서는 ‘중재·규제’ 유형에 많이 이루어졌으며, ‘의결’ 유형에는 상대적으로 참여가 적었다. 그리고 참여 가능성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매우 높음’의 참여 가능성이 있는 곳에 언론학자들의 참여가 높다. 그러나 참여 가능성이 ‘높음’과 ‘낮음’에 따라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법률적 규정의 정도와 실제 언론학자의 참여는 별 차이가 없었다.

(2) 정치 참여 언론학자의 특성

정치 참여 언론학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언론학자가 참여한 이사회·위원회별로 인구학적 배경과 학력적 배경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이사회·위원회는 참여 유형에 따라 ‘의결’, ‘심의·자문’, ‘중재·규제’로 크게 구분해 참여 유형별로 언론학자의 특성을 알아보려고 했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출생년도, 정치 참여 당시의 연령, 그리고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소재지인 지역을, 학력 특성으로는 출신대학과 최종학위 취득국가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언론학자의 인구학적 특성

참여 유형별 언론학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6>과 같다. 전체적으로 남성 언론학자의 참여비율이 높았다. 전체 164명의 언론학자 중 여성 언론학자는 22.6%(37명)에 불과했다. 연령은 임명 혹은 위촉되어 첫 임기를 시작했을 대의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50대 45.9%(73명), 40대 39.6%(63명)으로 40대, 50대의 참여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임명 혹은 위촉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소속대학의 소재지(지역)는 서울이 47.0%(77명), 경기 8.5%(14명), 서울, 경기 이외의 지역이 44.5%(73명)이었다. 서울과 경기를 합해 수도권으로 보았을 때, 수도권대 비수도권의 비율은 약 55:45로 수도권에 다소 높다.

참여 유형에 따라서 보면,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는 전체적인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변인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때, 먼저 남성 언론학자의 높은 비율은 모든 이사회·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여성 언론학자의 참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집중해 있어 여성 언론학자의 정치 참여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결’ 참여에서는 특히 여성 언론학자의 참여가 저조하며, 언론중재위원회가 속한 ‘중재·규제’

표 6. 언론학자의 인구학적 특성

참여 유형	이사회/위원회	성별		연령					지역			계
		남	여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이상	평균 (SD)	서울	경기	그 외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6 (85.7%)	1 (14.3%)	1 (14.3%)	2 (28.5%)	3 (42.9%)	1 (14.3%)	58.7 (10.31)	6 (85.7%)	1 (14.3%)	-	7 (19.5%)
	한국방송공사	12 (92.3%)	1 (7.7%)	4 (30.8%)	6 (46.1%)	1 (7.7%)	2 (15.4%)	56.1 (7.84)	7 (53.8%)	1 (7.7%)	5 (38.5%)	13 (36.1%)
	방송문화진흥회	8 (100%)	-	-	4 (50.0%)	3 (37.5%)	1 (12.5%)	59.9 (7.40)	7 (87.5%)	-	1 (12.5%)	8 (22.2%)
	한국교육방송공사	4 (100%)	-	-	2 (50.0%)	2 (50.0%)	-	51.5 (5.32)	2 (50.0%)	1 (25.0%)	1 (25.0%)	4 (11.1%)
	뉴스통신진흥회	4 (100%)	-	-	2 (50.0%)	2 (50.0%)	-	55.3 (9.67)	3 (75.0%)	-	1 (25.0%)	4 (11.1%)
	소 계	34 (94.4%)	2 (5.6%)	5 (13.9%)	16 (44.4%)	11 (30.6%)	4 (11.1%)	57.0 (8.26)	25 (69.4%)	3 (8.3%)	8 (22.2%)	36 (22.0%)
심의·자문	미디어다양성	8 (72.7%)	3 (27.3%)	5 (45.5%)	5 (45.5%)	1 (9.1%)	-	51.3 (7.13)	9 (81.8%)	1 (9.1%)	1 (9.1%)	11 (19.6%)
	여론집중도조사	7 (77.8%)	2 (22.2%)	5 (55.6%)	4 (44.4%)	-	-	48.8 (4.32)	6 (66.7%)	-	3 (33.3%)	9 (16.1%)
	지역방송발전	7 (87.5%)	1 (12.5%)	4 (50.0%)	4 (50.0%)	-	-	48.7 (6.29)	1 (12.5%)	1 (12.5%)	6 (75.0%)	8 (14.3%)
	지역신문발전	18 (85.7%)	3 (14.3%)	10 (47.6%)	9 (42.9%)	2 (9.5%)	-	50.2 (6.81)	5 (23.8%)	2 (9.5%)	14 (66.7%)	21 (37.5%)
	언론진흥기금관리	7 (100%)	-	2 (28.6%)	5 (71.4%)	-	-	52.9 (4.74)	5 (71.4%)	2 (28.6%)	-	7 (12.5%)
	소 계	47 (83.9%)	9 (16.1%)	26 (46.4%)	27 (48.2%)	3 (5.4%)	-	50.3 (6.17)	26 (46.4%)	6 (10.7%)	24 (42.9%)	56 (34.1%)
중재·규제	언론중재	41 (64.1%)	23 (35.9%)	30 (50.8%)	25 (42.4%)	4 (6.8%)	*무응답 5명 제외 (n = 159)		21 (32.8%)	4 (6.3%)	39 (60.9%)	64 (88.9%)
	방송통신심의	5 (62.5%)	3 (37.5%)	2 (25.0%)	5 (62.5%)	1 (12.5%)	-	52.4 (5.29)	5 (62.5%)	1 (12.5%)	2 (25.0%)	8 (11.1%)
	소 계	46 (63.9%)	26 (36.1%)	32 (47.8%)	30 (44.8%)	5 (7.4%)	(n = 159)	50.3 (6.17)	26 (36.1%)	5 (6.9%)	41 (56.9%)	72 (43.9%)
전체	127 (77.4%)	37 (22.6%)	63 (39.6%)	73 (45.9%)	19 (12.0%)	4 (2.5%)	51.8 (7.23)	77 (47.0%)	14 (8.5%)	73 (44.5%)	164 (100%)	

* 언론중재위원회 활동한 일부 언론학자 중에서 자료검색을 통해 연령을 알 수 없는 5명을 무응답 처리한 결과, 규제·중재유형과 전체의 연령별 백분율은 전체수 159명의 백분율임

에서도 남성 언론학자의 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참여 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성별의 차이를 보였다($\chi^2 = 14.875, df = 2, p < .01$).

다음으로 연령을 보면, 이사회·위원회별로 언론학자의 차이가 있다. 방송통신위원

회와 방송문화진흥회,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의 경우는 70대에 참여한 경우가 있고, 방송문화진흥회가 평균 59.9세($SD = 7.40$),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균 58.7세($SD = 10.3$)로 평균연령이 높고 편차도 컸다. 평균연령이 낮은 위원회는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M = 48.8$, $SD = 4.32$)와 지역방송발전위원회($M = 48.7$, $SD = 6.29$)로 연령 차이를 보였다. 각 위원회별로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의결 참여의 연령이 높아 참여 유형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chi^2 = 26.628$, $df = 8$, $p < .01$). 연령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을 때, '의결' 참여시의 연령은 '50대' 44.4%, '60대' 30.6%이었으며 '70대 이상'이 11.1%나 차지했다. 이처럼 70대 이상의 참여가 '의결' 참여에는 이루어지지만, '심의·자문' 참여나 '중재·규제'의 참여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40대와 50대가 많았다.

다음으로 이사회나 위원회에 참여했을 당시 재직하고 있던 대학소재지를 언론학자의 '지역'이란 변인으로 살펴보았다.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로 대학소재지를 구분하였으나 지역, 즉 지방대학을 적으로 두고 있는 언론학자의 참여가 적어 서울과 경기, 그리고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전체적으로 서울소재 대학에 적을 둔 언론학자가 많았으며, 특히 참여 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의결' 참여한 언론학자는 서울소재지에 적을 둔 언론학자였으며, '중재·규제' 참여의 경우 지역소재 대학에 재직한 언론학자의 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 = 27.378$, $df = 12$, $p < .01$).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는 특히 지역별 중재위를 두고 있어 지역소재 대학에 재직한 언론학자의 참여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언론학자의 정치 참여는 언론학자의 성별, 연령, 그리고 재직대학의 위치(서울)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남성 언론학자, 서울 소재 대학에 속한 언론학자의 참여율이 높다.

② 언론학자의 학력 특성

언론학자의 학력 특성으로는 출신대학과 박사학위 취득국가의 차이를 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출신대학은 학부를 기준으로 했다. 서울대와 서울대가 아닌 서울소재 대학, 지역소재 대학, 그리고 해외소재 대학으로 구분하여 코딩한 후, 특정 대학 출신이라는 '학맥'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전체적으로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21.3%(33명), 서울소재 대학이 69.0%(107명), 지역소재 대학이 5.8%(9명), 해외소재 대학 3.9%(6명)로, 서울소재 대학이 가장 많고 지역소재 대학과 해외소재 대학은 소수에 불과했다. 가장 높은

표 7. 참여 유형별 언론학자의 학력 특성

참여 유형	이사회/위원회	출신대학					박사학위 취득국가					계
		서울대 : 非서울대	서울대	서울 소재	지역대	해외대	미국유학 : 非미국 유학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의 결	방송통신위원회	29:71	2 (28.6%)	4 (57.1%)	1 (14.3%)	-	29:71	3 (42.9%)	2 (28.5%)	2 (28.5%)	-	7 (20.0%)
	한국방송공사	46:58	6 (46.2%)	7 (53.8%)	-	-	31:69	8 (61.5%)	4 (30.8%)	1 (7.7%)	-	13 (34.3%)
	방송문화진흥회	12:88	1 (12.5%)	3 (87.5%)	-	-	50:50	2 (25.0%)	4 (50.0%)	1 (12.5%)	1 (12.5%)	8 (22.9%)
	한국교육방송공사	0:100	-	4 (100%)	-	-	25:75	2 (50.0%)	1 (25.0%)	-	1 (25.0%)	4 (11.4%)
	뉴스통신진흥회	25:75	1 (25.0%)	3 (75.0%)	-	-	100:0	-	4 (100%)	-	-	4 (11.4%)
	소 계	28:72	10 (27.8%)	25 (69.4%)	1 (2.8%)	-	43:57	15 (40.0%)	15 (42.9%)	4 (11.4%)	2 (5.7%)	36 (22.6%)
심 의 · 자 문	미디어다양성	27:72	3 (27.3%)	5 (45.5%)	1 (9.1%)	2 (18.2%)	82:18	2 (18.2%)	9 (81.8%)	-	-	11 (19.6%)
	여론집중도조사	33:67	3 (33.3%)	6 (66.7%)	-	-	56:44	3 (33.3%)	5 (55.6%)	-	1 (11.1%)	9 (16.1%)
	지역방송발전	13:87	1 (12.5%)	6 (75.0%)	1 (12.5%)	-	25:75	5 (62.5%)	2 (25.0%)	-	1 (12.3%)	8 (14.3%)
	지역신문발전	10:90	2 (9.5%)	17 (81.0%)	1 (4.8%)	1 (4.8%)	33:67	12 (57.1%)	7 (33.3%)	-	2 (9.5%)	21 (37.5%)
	언론진흥기금관리	29:71	2 (28.6%)	5 (71.4%)	-	-	71:29	1 (14.3%)	5 (71.4%)	-	1 (14.3%)	7 (12.5%)
	소 계	20:80	11 (19.6%)	39 (69.6%)	3 (5.4%)	3 (5.4%)	50:50	23 (41.1%)	28 (50.0%)	-	5 (8.9%)	56 (35.2%)
중 재 · 규 제	언론중재	16:84	9 (16.4%)	39 (70.9%)	5 (9.1%)	2 (3.6%)	46:54	26 (44.1%)	27 (45.7%)	1 (1.7%)	5 (8.5%)	59 (77.8%)
	방송통신심의	38:62	3 (37.5%)	4 (50.0%)	-	1 (12.5%)	63:37	2 (25.0%)	5 (62.5%)	-	1 (12.5%)	8 (22.2%)
	소 계	19:81	12 (19.0%)	43 (68.3%)	5 (7.9%)	3 (4.8%)	48:52	28 (41.8%)	32 (47.7%)	1 (1.5%)	6 (9.0%)	67 (42.1%)
전체	21:79	33 (21.3%)	107 (69.0%)	9 (5.8%)	6 (3.9%)	47:53	66 (41.5%)	75 (47.2%)	5 (3.1%)	13 (8.2%)	159* (100%)	

* 언론중재위원회 활동한 일부 언론학자 중에서 자료검색을 통해 출신대학과 최종학위국가를 알 수 없는 5명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학력적 분석은 15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임.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대라는 한 개의 대학이 전체 언론학자 출신대학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울대의 독식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수 십여 개의 서울 소재 대학이 있음을 고려할 때 한 개의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는 결코 적다 할 수는

없다. 각 이사회·위원회별로 보았을 때 출신대학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chi^2 = 34.120, df = 36, p > .05$). 또한 참여 유형에 따라서도 출신대학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박사학위 취득국가는 국내 취득과 해외 취득자(미국, 일본, 유럽)로 구분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미국 취득이 47.2%($n = 75$)로 가장 많았으며, 국내 취득이 41.5%($n = 66$), 유럽국가 8.2%($n = 13$), 일본 3.1%($n = 5$)이었다. 위원회별로 보았을 때, 언론학자의 박사학위 취득국가는 현황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 = 52.02, df = 36, p < .05$). 즉 뉴스통신진흥회나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등은 해외유학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반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등은 국내 취득자의 비율이 높았다. 참여 유형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위원회의 참여 유형보다는 위원회의 개별적 특성이 참여 언론학자의 학력 배경과 연관 있음을 알 수 있었다($\chi^2 = 10.33, df = 6, p > .05$). 또한 ‘미국유학’이라는 변인을 강조해 미국유학과 비미국유학으로 구분해 본 결과, 참여 언론학자의 50% 정도가 ‘미국 유학’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예상했던 것과 달리 독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위원회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chi^2 = 27.487, df = 12, p < .01$), 참여 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chi^2 = .627, df = 2, p > .05$). 즉 ‘해외박사’, 특히 ‘미국유학’이라는 변수는 이사회·위원회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이기는 하지만, 어떤 유형의 참여를 할지를 결정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정치 참여 언론학자의 학력 특성, 즉 출신대학과 박사학위취득국가를 살펴본 결과를 보면 ‘서울대 출신’, 그리고 해외유학자 중에서도 ‘미국유학’ 중심의 ‘학맥’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참여 유형과는 상관없다는 한계가 있었다.⁴⁾

5. 결론 및 제언

학자가 현실문제에 참여하고 발언하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언론학자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언론학계에서는 사회참여를 곡학아세(曲學阿世)하

4) 최낙진·김성혜(2016)의 연구는 이를 더욱 깊이 있게 관찰한 것으로 이들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지위를 차지한 언론학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이 보편적으로 관찰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는 권력지향적 학자로 비난하거나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중적인 분위기가 존재한다. 누가, 어떤 조건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참여하는지, 즉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종합적인 분석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권력에 참여하기 위한 규범적 기준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도 부족했다. 이 연구는 그런 고민을 느끼는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시작했다. 연구진은 언론학 관련 행정부처에서 관할하는 각종 이사회·위원회에 참여하는 언론학자가 누구이고 그 참여양상은 어떠한지 분석하는 것으로 출발점을 삼았다. 학자로서의 정치 참여와 정치권력의 측면에서 사외이사나 언론이 아닌 다른 분야의 참여에 대한 분석도 의미가 있지만 너무 범위가 넓어질 것을 우려했다. 단순한 현황 파악 이외의 작업이 필요했지만 참여관찰이나 상호검증 가능한 인터뷰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후속연구로 남겼다.

먼저 법률이 규정하는 이사회·위원회로는 어떤 곳이 있고, 참여 자격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으며, 선정 방식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했다. 분석결과, 법률에 규정된 자격요건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특히 인사권과 재정운영에 대한 결정 등을 가진 ‘의결’ 참여 유형에서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이어야 한다는 식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위촉·임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언론학 관련 정부부처인 방통위와 문체부의 여러 이사회와 위원회에서 언론학자뿐만 아니라 타전공자의 참여와 함께 규정되어 있고 언론학 관련 전공분야는 ‘여러 학문분야 중의 하나’로 되어 ‘참여 가능성’이 낮았다. 참여 가능성이 ‘낮음’에 해당하는 이사회와 위원회가 전체 분석의 19개 위원회 중 11개에 이른다. 이러한 것은 ‘전공에 대한 전문지식’을 통해 참여의 기회가 열려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전공자들과 그 기회를 나누어 그 참여 기회의 폭을 줄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 유형별로는 ‘의결’ 7개, ‘자문·심의’ 10개, 중재·규제가 각각 1개로 2개 위원회로 ‘자문·심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언론학자의 참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그동안 참여한 언론학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학력 배경을 분석했다. 법률적으로 규정된 19개의 이사회와 위원회를 모두 분석하지 않고, 참여 유형과 참여 가능성 정도를 고려해 ‘의결’ 5개, ‘자문·심의’ 5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중재’, ‘규제’는 각각 1개에 불과하였기에 이 둘을 합하여 ‘중재·규제’로 구분하여 총 12개의 이사회 및 위원회를 대상으로 전현직 참여 언론학자를 조사했다. 참여 언론학자수는 164명으로 방통위 소관 이사회·위원회(7개)에 59명이, 문체부 소관 이사회·위원회(5개)에 105명이 참여했다. 참여 유형에 따라서는 ‘의결’ 참여가 36명(22.0%) ‘심의·자문’ 56명(34.1%), ‘중재·규제’ 72명(43.9%)이었다.

인구학적 특성으로 남성 언론학자의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이사회나 위원회 당시 연령은 대체로 주요 활동층으로 볼 수 있는 50대가 많았다. 참여 유형에 따라 '의결' 참여 연령이 상당히 높은 층을 보여 다른 유형의 참여자 특성과 대조를 이루었다. 중요한 측면은 이사회·위원회 활동 당시의 교수로서 재직하고 있는 대학소재지인 지역이 서울 집중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특별히 규정에 지역신문, 지역방송 등의 명칭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성은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인구학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의미부여와 해석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 했다. 이 자료에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앞으로 통시적 비교와 같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객관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신 학력 배경에 대해서는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는데, 이는 학자, 교수라는 지식 집단에서 학력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는 사회적 통념으로 알려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참여 학자들 중 상당수는 '서울대 출신'이었으며 '미국유학'이라는 '학맥'이 중요했다. '의결' 참여, '심의·자문' 참여, '중재·규제' 참여 모두 서울대라는 특정 대학출신자가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독점 우려가 나왔다. 뉴스통신진흥회나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등의 위원회에서는 해외유학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반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등은 국내 박사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서울소재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재직대학의 소재지라는 지역적 특성도 중요한 변인이었다. 학부출신과 미국유학이라는 학력 변인에 덧붙여 흔히 '4대문 안의 대학에 교수자리를 잡는 것'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본 논문은 법률적 근거 분석에서 시작해 언론학자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 그리고 그 기회에 대해 언론학자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공정하게 살펴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분석결과는 사회적 통념으로 이미 알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일부 주류 집단에 치우친 경향성과 다양성 부족이라는 점은 확인했다. 막연히 아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것도 성과로 볼 수 있다. 향후 전문성과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합의'를 토대로 규정을 강화해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정치, 경제, 교육 등 다른 전문분야와 비교했을 때 현재의 규정이 느슨한지, 모호한지 또는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 역시 후속적으로 가능하다. 그밖에, 학맥에 의해 일부 정치 참여 기회가 독점되는 것이 정당한지, 지역별 다양성을 얼마나 존중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성찰의 기회도 제공했다.

첫 발을 내딛는 연구라는 점에서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언론보도와 교차 검증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몇몇 학자가 누락되거나 분석 대상이 된 경우에도 일

부 경력을 모두 다루지 못한 결점이 있다. 또한 정치 참여 방식을 ‘언론 관련 행정기구’로 제한하고 그 기구가 관할·관장하는 법률에 근거한 이사회와 위원회에 한정했다는 점도 약점이다. 금전적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더 큰 권력행사로 볼 수 있는 사외이사나 권한과 실세를 갖춘 다른 분야의 참여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여한 언론학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듣고, 이들이 실제 현장에서 부여받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법률적 근거에 따라 형식적인 참여나 단순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깊이 있는 분석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끝으로, 정치 참여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에 대한 후속 연구, 그리고 언론학자로서 전문성과 대표성으로 정리되는 참여 자격에 대한 후속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명구 (2014). 어떤 학자와 교수를 키울 것인가: 대학평가와 지식생산. <커뮤니케이션이론>, 10권 1호, 127-168.
- 강준만 (1994). 방송정책 수립과정과 교수참여의 문제점: '끝말주의' 방송정책에 '소모' 되는 언론학자. <저널리즘비평>, 13호, 한국언론학회, 45-54.
- 권순택 (2012, 8, 16). 조선일보 사장이 KBS 이사돼도 법적 문제 없다. <미디어스>. URL: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17>
- 김건우 (2015, 10, 21). 근대화 인텔리겐치아론과 지식인의 변절 논쟁. <주간동아>, 통권1009호, 64-67.
- 김경자 (2015). 풍요와 결핍의 딜레마: 언론학의 숙명인가, 변화의 출발선인가?. <커뮤니케이션이론>, 11권 2호, 4-17.
- 김남석 (1989). 한국 언론학 연구의 동향. <사회과학연구>, 1권, 61-82.
- 김동민 (1999). 언론개혁과 언론학자의 처신. <인물과사상>, 통권 15호, 162-167.
- 김만흠·손혁재·김동춘·홍일표·김갑식 (2003). <한국의 언론정치와 지식권력>. 서울: 당대
- 김상봉 (2004). <학벌사회: 사회적 주체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 서울: 한길사.
- 김성해·반현 (2011). <저널리즘의 복원>.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승수 (2014, 11월). <진실과 격투하는 미디어 지식인>.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영모 (2009). <한국 권력지배층 연구>. 서울: 고현.
- 김학수 (1999). 언론학자의 두 가지 사회적 책무. <저널리즘비평>, 27권, 104-105.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URL: <http://www.mcst.go.kr/index.jsp>
- 박노자 (2001). <당신들의 대한민국>. 서울: 한겨레신문사.
- 박진우 (2013). 어떤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한가: 언론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의 인문학의 현실과 과제. <커뮤니케이션이론>, 9권 3호, 4-34.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URL: <http://www.kcc.go.kr/user.do>
- 변동현 (1998). TV선거보도의 공정성 개념에 관한 인식틀 연구: 언론학자와 방송언론인을 중심으로. <언론문화연구>, 15권, 33-82.
- 설진아 (2014). 신뢰 잃은 주류언론, 시민의 감시대상. <신문과방송>, 6월호, 10-14.
- 손석춘 (2014). 도구적 지식과 지식인의 도구화: 대학, 자본, 권력의 '삼각동맹'론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10권 1호, 25-56.
- 이봉수 (2012, 6, 26). 우리방송을 망친 이데올로그들. <한겨레>, 29면.
- 이정철 (2010).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서울: 역사비평사.
- 이태희·신윤동욱 (2002, 12, 23). 한국사회 '주류'가 바뀐다. <한겨레>, 1면.
- 이한우 (2004). <지식의 성장>. 서울: 살림출판사.
- 임영호 (2013). 한국 언론학의 제도적 성공담과 내재적 위기론. <커뮤니케이션이론>, 9권 1호, 6-38.

- 정명환 (2003). 프랑스 지식인과 정치: 정치 참여의 세 가지 유형에 관하여. <세계의문학>, 28권 1호 (통권107호), 225-277.
- 중앙일보 (2006). <대한민국 파워엘리트>. 서울: 황금나침반.
- 진덕규 (2011). <권력과 지식인>. 서울: 지식산업사.
- 최낙진·김성해 (2016). 언론학자와 권력: 정치화된 지성의 위험한 줄다리기. <의정연구>, 48권, 103-135.
- 최장집 (2009). 한국의 진보적 지식사회와 지식인의 변형. <황해문화>, 209-246.
- Bourdieu, P. (1987). *Choses dites*. Paris, FR: Minute.
- Debray, R. (2000). *i.f. suite et fin*. 강주현(역) (2001). <지식인의 종말>. 서울: 예문.
- Domhoff, W. (2009). *Who Rules America?* (6th ed.). New York, NY: McGraw-Hill.
- Foucault, M. (1969). *L'Archéologie du savoir*. Paris, FR: Gallimard.
- Foucault, M. (1972). Les intellectuels et le pouvoir. *Dits et écrits*, Tome II, n° 106
- Jacoby, R. (1987). *The Last Intellectuals: American Culture in the Age of Academe*. New York, NY: Basic Books.
- Liotard, J. F. (1984). *Tombeau de l'intellectuel et autres papiers*. 이현복 (역) (1993). <지식인의 종언>, 서울: 문예출판.
- Mills, C. W. (1956). *The Power Elite*. London & New York: Oxford Press.
- Roi, M. (1995). *Chomsky's Politics*, Verso. 김석근·장휘 (2004). <츨스키와 정치: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과 정치 참여>. 서울: 산해.
- Said, E. (2012).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 London, UK: Vintage.

투고일자: 2016. 3. 13. 게재확정일자: 2016. 9. 22. 최종수정일자: 2016. 9. 25.

부록

이사회·위원회 참여자 명단*

구 분		참여 언론학자(재직대학명)
방통위 소관 (7개)	방송통신위원회 (7명)	강대인(건국대), 김우룡(한국외대), 김충식(가천대), 양문석(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재(경희대), 이상희(서울대), 이효성(성균관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8명)	구종상(동서대), 김유정(수원대), 박명진(서울대), 박성희(이화여대), 손태규(단국대), 윤석민(서울대), 이재진(한양대), 장낙인(우석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11명)	김동률(서강대), 김정기(한양대), 오택섭(고려대), 우지숙(서울대), 유익선(이화여대), 이수영(서강대), 이준웅(서울대), 조성호(경북대), 최선규(명지대), 한희정(국민대), 황용석(건국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8명)	김재영(충남대), 류한호(광주대), 양문석(공공미디어연구소), 이문행(수원대), 이진로(영산대), 주정민(전남대), 최용준(전북대), 한진만(강원대)
	한국방송공사사회 (13명)	강현두(서울대), 김서중(성공회대), 신태섭(동의대), 유재천(상지대), 이병혜(명지대), 이상희(서울대), 이창근(광운대), 이창현(국민대), 정문식(강원대), 최양수(연세대), 최영목(성공회대), 한진만(강원대), 황근(선문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 (4명)	김동률(서강대), 박종렬(가천대), 성동규(중앙대), 신태섭(동의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8명)	김우룡(한국외대), 박천일(숙명여대), 방정배(성균관대), 유익선(이화여대), 이범수(동아대), 이상희(서울대), 최창섭(서강대), 한균태(경희대)
문체부 소관 (5개)	한국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7명)	김택환(경기대), 양승목(서울대), 유익선(이화여대), 이용준(대진대), 이준웅(서울대), 한균태(경희대), 황상재(한양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9명)	김국진(미디어미래연구소), 배진아(공주대), 성동규(중앙대), 심미선(순천향대), 양승찬(숙명여대), 윤석민(서울대), 윤영철(연세대), 이민규(중앙대), 조성경(충남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4명)	박영성(한양대), 손영준(국민대), 윤석홍(단국대), 최영재(한림대)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중재위: 21명)	강미은(숙명여대), 김동규(건국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영석(연세대), 김정기(한양대), 김정택(성균관대), 김학수(서강대), 김희진(연세대), 박동숙(이화여대), 박성희(이화여대), 박종렬(가천대), 손영준(국민대), 양승목(서울대), 유세경(이화여대), 유익선(이화여대), 이수영(서강대), 장하용(동국대), 제정임(세명대), 한균태(경희대), 한은경(성균관대), 홍은희(명지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21명)	김덕모(호남대), 김동규(건국대), 김영옥(한국언론재단), 김영호(우석대), 박상건(성균관대), 우병동(경성대), 윤석년(광주대), 이승선(충남대), 이영원(우석대), 이오현(전남대), 이용성(한서대), 이의자(경성대), 이종혁(광운대), 임영호(부산대), 장호순(순천향대), 정상윤(경남대), 조성경(충남대), 최경진(대구카톨릭대), 최창섭(서강대), 홍문기(한서대), 홍은희(명지대)

* 2003년 4월~2015년 10월(가나다순).

** 언론중재위원회는 서울중재위만 제시.

Politics through Academic Career or Academic Career for Politics

Focused on the current status and conditions of Media scholars' political participation

Sung Hae Kim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Communication, Daegu University

Bo Yun Seo

Research Fellow, Journalism Studies Institute

Min Jung Jin

Postdoctoral Researcher, Daegu University

Kuk Jin Kang

Seoul Shinmun / Doctoral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Sungkyunkwan University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as an academic field is believed more politicized one than pure literature and natural science. With the growth of the media, there follows additional opportunities for media scholars to take a part in politics as well. Few attention was given to understand the status and mechanism of political intervention either as advisers or decision makers though. This study attempts thus to fill this vacuum. For this, first of all, it examines a various types of laws related to media politics. Total number of 164 scholars who participated in 12 councils and commissions were analyzed on the following step. Research shows that there are patterns which favor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trained Ph. D and geographic preference to the capital. Neither academic excellence nor commitment to public interest appear to have impact on taking those positions. Taking into account media's expansion into politics, it is inevitable for media scholars to take responsibility not only in policy making but in taking leadership. Accordingly, the question of necessity is not who but how as much as manner. The authors hope this study will be a valuable opportunity to establish a kind of ethical standards in media politics.

KEYWORDS Intellectuals, Media Policy, Professionalism, Public Interest, Politics, Power